



보험연구원
Korea Insurance
Research Institute

보 도 자 료

보도

2016. 10. 27(목) 15:00부터

배포

2016. 10. 26(수)

책임자

금융전략실
이기형 실장(3775-9014)

작성자

전용식 연구위원(3775-9035)

홍보담당

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총 2매

제목 : 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

- 보험연구원(원장: 한기정)은 「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」 세미나를 10월 27일(목)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함.
-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「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」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과 과실분쟁의 원인을 진단하고,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.
- 이후 학계, 금융당국, 법조계, 보험업계,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진행됨.

과실상계제도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공신력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제정이 필요

-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은 2012년 개인용 차량사고 100건 가운데 0.75건에서 2015년 1.12건으로 연평균 14% 증가함.
- 개인용 차량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2.2% 증가에 그침.
- 과실비율 분쟁 증가의 원인은 차량가액 상승으로 인한 손해액 증가와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고 당사자의 주장 번복, 그리고 이로 인한 수정요소 적용의 불확실성 등임.
- 과실비율 분쟁조정 청구건수 가운데 외제차 비중은 24%, 손해액 200만

원 이상인 비중은 약 40%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 가운데 외
제차 비중은 약 15.7%, 손해액 200만 원 이상 비중은 4.3%에 불과함.

*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이 합의된 차대차 사고 97,286건과 과실비율 분쟁이
발생한 차대차 사고 7,318건을 분석한 결과임.

- 수입차 내수 점유율은 2012년 10%에서 2015년 9월 16.2%로 상승

- 사고정황 관련 공신력 있는 증거 부족으로 사고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
하고 번복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과실비율 분쟁으로 이어짐.
- 과실비율은 기본과실에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결정되는데 2개 이상의 수
정요소를 적용한 사고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.

□ 전용식 연구위원은 “과실비율 분쟁 증가는 분쟁조정 비용 등 사회적
비용 증가와 과실상계제도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개
선이 필요하다”고 주장함.

-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고 증거 확
보와 수정요소 적용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.
- 객관적인 사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사고보고서를 작성하
고 운전자의 서명 확인을 받는 방안을 도입해야 함.
- 수정요소 적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정요소가 정의하는
과실비율의 객관화, 그리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반영한 수정요소 적용
개수 제한이 필요함.
- 수정요소 적용 가이드라인을 법원이 주도적으로 확립하고 장기적으로
는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정립해야 함.
- 이를 위해서는 학계, 업계, 법조계, 경찰, 시민단체 통합의 T/F를 구
성하고, 이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.

<별첨> 세미나 발표자료 각 1부. 끝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kiri.or.kr>